



2025년 첫번째

재정정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목 차

01

CHAPTER

재정분석



- 2025 나라살림 재정 개요 01
- 2025 세종특별자치시 재정 개요 04
- 20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재정 개요 08

02

CHAPTER

재정이슈



- 2024년 총수입·총지출마감 및 보통교부세 감소 분석 12
- 2025-2029 자치단체 채무관리계획 분석 15
- 2024년 고향사랑 기부제 성과와 과제 17
- 재정 뉴스 20

03

CHAPTER

재정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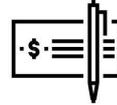
- 2024년 광역시·도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분석
및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사항 25
- 지방세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에 관한 연구 28
-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31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 34

'재정정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최근 중앙부처 및 국내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국가·지방재정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를 종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정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며,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개선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04 CHAPTER

경제동향



정부 경제동향 - 기획재정부	38
정부 재정동향 - 기획재정부	39
KDI 경제동향 - 한국개발연구원	40
지역경제보고서 - 한국은행	41
NABO 산업동향&이슈 - 국회예산정책처	42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43

05 CHAPTER

재정통계



주요 경제지표	45
세종시 주요 통계	48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50

01 재정분석

① 2025년 나라살림 재정개요

- ▶ 2025년 총수입 651.6조원 - 전년 대비 39.4조원 증가
- ▶ 2025년 총지출 673.3조원 - 전년 대비 16.7조원 증가

②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개요

- ▶ (예산) 1조 9,815억원 - 전년 대비 756억원(3.97%) 증가
- ▶ (기금) 2,389억원 - '24년 당초대비 △181억원(△7.06%) 감소

③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재정개요

- ▶ (예산) 1조 1,834억원 - 전년 대비 772억원(7.0%) 증가
- ▶ (기금) 1,398억원 - '24년 당초대비 △1,838억원(△56.79%) 감소

01. 2025년 나라살림 재정 개요

- 지난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10월 31일 ~ 11월 29일)를 거쳐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2025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677.4조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4.1조원이 감액되어, 총 673.3조원 규모로 최종 확정

□ 자원배분 방향

- ▶ 정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고물가·고금리 지속, 경기 둔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경기 둔화와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
- ▶ 이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재정 투자를 통해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활력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국가 안전망 강화를 추진
- ▶ 중점 분야
 - ① 약자복지 확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의료급여 확대, 장애인·노인 지원 강화
 - ② 경제활력 제고: 수출·투자 지원, 창업·벤처기업 육성, 산업·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③ 미래 대비 투자: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 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기술 강화
 - ④ 안전·외교 강화: 국방(61.2조 원), 외교·통일(7.7조 원), 공공안전(25.0조 원) 투자

□ 2025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내용

○ [총수입] 2025년 총수입은 651.6조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함

- ▶ 예산수입은 2024년 395.5조원에서 2025년 418.7조원으로 5.9% 증가
- ▶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확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로 기금 수입이 216.7조 원에서 232.8조 원으로 7.4% 증가

○ [총지출] 2025년도 총지출은 673.3조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함

- ▶ 2025년 총지출은 2024년 대비 2.5% 증가한 673.3조원으로, 최근 20년 내 가장 낮은 증가율 기록

- ▶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수 분야에 선택과 집중된 전략적 재정 운영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지출을 줄이고, 서민 보호, 경제 활력 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

【2025년도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24	2025	증감률	비고
총수입	612.2	651.6	6.4%	
▪ 예산(세입)	395.5	418.7	5.9%	일반+특별회계
▪ 기금(수입)	216.7	232.8	7.4%	
총지출	656.6	673.3	2.5%	
▪ 예산(세출)	438.3	447.4	2.1%	일반+특별회계
▪ 기금(지출)	218.4	225.9	3.5%	

- 총수입 = 일반회계수입 + 특별회계수입 + 기금수입 - 내부거래 - 보전거래
- 총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수입)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0.9%p 개선(△1.8→△0.8%)
-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0.8%p 개선(△3.6→△2.8%)
- ▶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0.7%p 증가(47.4→48.1%)

【2025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단위:조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증 감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44.4 (△1.8%)	△21.7 (△0.8%)	22.7 (0.9%)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91.6 (△3.6%)	△73.9 (△2.8%)	17.8 (0.8%)
국가채무 (GDP 대비)	1,195.8 (47.4%)	1,273.3 (48.1%)	77.5 (0.7%)

-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수치이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임

○ 분야별 예산

- ▶ 2025년도 예산의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규모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48.7조원(37%)으로 가장 크고, 이어 일반·지방행정(110.7조원), 교육(98.5조원), 국방(61.2조원) 순으로 나타남

【2025년도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조원,%)

구 분	2024년(A)	2025년(B)	증 감	
			전년대비(B-A)	증가율
총지출	656.6	673.3	16.7	2.5
1. 보건·복지·고용	237.6	248.7	11.1	4.7
2. 교 육(교부금 제외)	95.2	98.5	3.3	3.5
3. 문화·체육·관광	8.7	8.8	0.1	0.6
4. 환 경	12.5	13.0	0.5	3.8
5. R&D	26.5	29.6	3.1	11.5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2	0.2	0.7
7. SOC	26.4	25.4	△1.0	△3.8
8. 농림·수산·식품	25.4	25.9	0.5	1.8
9. 국 방	59.4	61.2	1.8	3.1
10. 외교·통일	7.5	7.7	0.2	2.3
11. 공공질서·안전	24.4	25.0	0.6	2.3
12. 일반·지방행정	110.5	110.7	0.1	0.1

○ 2025년도 세종시 관련 국회 확정 주요 사업 현황

(억원)

연 번	구분	사업명	부처	'25년 예산						
				정부안(A)	상임위	국회 최종(B)	국회증감(B-A)			
1	국회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행복청	99	1 (△98)	-	△99			
2	감액	'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산림청	77	(△77)	-	△77			
3	상임위 증액 미반영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운영 지원	행복청	12.6	26 (+13.4)	12.6	-			
4	정부 원안	신규 사업	노후상수도 정비	환경부	19	19	19	-		
5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과기부	23	23	23	-		
6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국가유산청	18	18	18	-		
7			세종~천안 BRT 1단계 구축	국토부	1	1	1	-		
8			노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	행안부	5	5	5	-		
9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환경부	5	5	5	-		
10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문체부	30	30	30	-		
11			실내형 한글놀이터 조성	문체부	4	4	4	-		
12			통과	계속 사업	국회세종의사당	행복청	350	350	350	-
13					대통령제2집무실	행복청	45	45	45	-
14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문체부	102	102	102	-
15	세종~안성 고속도로	국토부			242	242	242	-		
16	세종~청주 고속도로	국토부			1,199	1,199	1,199	-		
17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산업부	43	43	43	-			

02.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 개요

- 지난 2024년 11월 1일 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11.26 ~ 12.3)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12.5~12.23)를 거쳐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
-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56억원(3.97%) 증가한 1조 9,815억원이며, 기금은 전년도 대비 △181억원(△7.06%) 감소한 2,389억원임

□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개요

○ 본예산 편성규모

- ▶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 9,059억대비 756억원(3.97%) 증가한 1조 9,815억원
- ▶ (일반회계) 전년도 본예산 1조 5,668억원 대비 799억원(5.10%) 증가한 1조 6,468억원
- ▶ (특별회계) 전년도 본예산 3,391억원 대비 △43억원(△1.28%)감소한 3,347억원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5년 예산		'24년 본예산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9,815	100.0%	19,059	100.0%	756	3.97%
지방세수입	8,474	42.77%	8,518	44.69%	△43	△0.51%
세외수입	1,866	9.42%	1,795	9.42%	71	3.99%
지방교부세	1,284	6.48%	1,254	6.58%	29	2.37%
보조금	4,603	23.23%	4,233	22.21%	370	8.75%
지방채	740	3.74%	405	2.13%	334	82.4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46	14.37%	2,853	14.97%	△6	△0.22%

- ▶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756억원(3.97%) 증가한 1조 9,815억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43억원(△0.5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억원(△0.22%) 각각 감소했으나, 세외수입에서 71억원(3.99%), 지방교부세 29억원(2.37%), 보조금 370억원(8.75%), 지방채 334억원(82.44%) 증가에 따른 것임

- ▶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454억원(18.41%) 증가했지만, 취득세 △529억원(△24.41%), 지방소득세 △71억원(△6.64%), 자동차세 △57억원(△9.47%) 감소가 주요 원인임
- ▶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15억원(△2.22%) 감소했지만,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이자 수입 증가로 87억원(7.99%) 증가함
- ▶ 지방교부세 1,284억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29억원(2.37%) 증가했지만, 제4회 추경예산안의 1,363억원과 비교하면 △80억원 감소

○ 세출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5년 예산		'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9,815	100%	19,059	100%	756	3.97%
일 반 공 공 행 정	1,578	7.96%	1,473	7.73%	104	7.12%
공 공 질 서 및 안 전	1,190	6.01%	1,154	6.06%	35	3.08%
교 육	991	5.00%	924	4.85%	66	7.21%
문 화 및 관 광	759	3.83%	646	3.39%	113	17.57%
환 경	1,957	9.88%	2,101	11.02%	△144	△6.86%
사 회 복 지	5,374	27.12%	5,299	27.80%	74	1.41%
보 건	375	1.90%	331	1.74%	43	13.20%
농 립 해 양 수 산	1,071	5.41%	1,030	5.41%	41	4.0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78	2.41%	427	2.24%	51	11.95%
교 통 및 물 류	1,343	6.78%	1,242	6.52%	100	8.10%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698	8.57%	1,627	8.54%	71	4.38%
과 학 기 술	84	0.43%	86	0.45%	△1	△1.78%
예 비 비	141	0.71%	124	0.65%	16	13.35%
기 타	2,771	13.98%	2,589	13.59%	181	7.00%

- ▶ 사회복지(27.12%, 5,374억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13.98%), 환경(9.88%), 국토 및 지역개발(8.57%), 일반공공행정(7.96%) 등의 순으로 예산이 배분
- ▶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17.57%)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

(13.35%), 보건(13.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1.95%), 교통 및 물류(8.10%), 교육(7.21%), 일반공공행정(7.12%) 순으로 증가함

- ▶ (일반공공행정) 전년 대비 104억원(7.12%) 증가한 1,578억원으로 예산담당관 내부 거래지출(예수금 원금·이자 상환) 565억원, 자치행정과 내부거래지출(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41억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101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0억원 등으로 예산 규모가 다소 증가함
- ▶ (문화 및 관광) 전년 대비 113억원(17.57%) 증가한 759억원으로 주요 사업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운영 136억원, 문화도시 조성 60억원, 위탁체육시설 운영 54억원, 장육진기념관 건립 49억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27억원 등이 포함되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59억원, 장육진기념관 건립은 32억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22억원 등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며,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함
- ▶ (사회복지) 전년 대비 74억원(1.41%) 증가한 5,374억원으로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827억원, 영유아보육료 468억원, 부모급여 지급 326억원, 아동수당 지원 319억원 등을 반영, 부모급여 지급 △123억원 등 크게 감소하는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88억원·기초연금 지급 74억원 증가로 전년 대비 예산 규모가 소폭 증가함
- ▶ (교통 및 물류) 전년 대비 100억원(8.10%) 증액된 1,343억원으로 주요 사업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지원 343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81억원, 공공형버스 재정지원 102억원, 도로구조물 기전설비 유지관리 66억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52억원 등을 반영,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공공형버스 재정지원 등의 사업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 (국토 및 지역개발) 전년 대비 71억원(4.38%) 증가한 1,698억원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103억원, 월하천 재해예방사업 85억원, 공원녹지관리 79억원, 소하천 정비 77억원 반영, 신규사업인 근동천 개선복구사업 61억원 포함으로 예산 규모가 다소 증가

○ 검토사항

- ▶ 2025년 예산은 1조 9,8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6억 원(3.97%) 증가했으나, 주요 재정 지표와 통계를 고려할 때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 세입예산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지방세와 주요 세입원이 감소한 가운데,

세종시는 공동주택 준공·입주 물량 감소로 취득세가 저조하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도 큰 증가 없이 세수 결손을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하고 있음

- ▶ 세출예산은 복지 수요 증가와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확대되었지만, 국비 매칭 사업과 일부 공공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가 필요하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기금운용계획

[기금별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계획안	구성비	전년도 당초계획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총 계(14개 기금)	238,916	100.0%	253,926	100.0%	△15,010	△5.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8,228	45.30%	100,679	39.65%	7,549	7.50%
지 역 개 발 기 금	56,987	23.85%	76,261	30.03%	△19,274	△25.27%
재 난 관 리 기 금	25,183	10.54%	22,723	8.95%	2,460	10.82%
재 해 구 호 기 금	18,941	7.93%	15,866	6.25%	3,074	19.38%
남북교류협력기금	1,254	0.52%	1,236	0.49%	18	1.48%
자 활 기 금	1,080	0.45%	1,066	0.42%	14	1.32%
양 성 평 등 기 금	1,105	0.46%	1,027	0.40%	78	7.61%
식 품 진 흥 기 금	1,902	0.80%	1,687	0.66%	215	12.75%
중소기업육성기금	3,119	1.31%	4,764	1.88%	△1,645	△34.54%
투 자 진 흥 기 금	12,024	5.03%	19,094	7.52%	△7,070	△37.03%
농 업 발 전 기 금	7,383	3.09%	8,426	3.32%	△1,042	△12.37%
옥외광고발전기금	879	0.37%	687	0.27%	192	28.01%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77	0.12%	278	0.11%	△1	△0.12%
고 향 사 랑 기 금	553	0.23%	133	0.05%	421	317.37%

- ▶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24년 당초 계획 대비 △150억원(△5.91%) 감소한 2,389억원임
- 주요 증감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억원(1,007→1,082), 지역개발기금 △192억원(763→570), 투자진흥기금 △71억원(191→120)

03. 2025년 세종특별자치교육비특별회계 재정 개요

- 세종시교육청 예산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1조 1,062억원 대비 772억원(7.0%) 증가한 1조 1,834억원임
- 2025년도 운용할 기금은 전년도 당초계획 3,236억원 대비 △1,838억원(△56.79%) 감소한 1,398억원임

□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개요

○ 편성방향

- ▶ 세종교육 비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핵심정책과제 이행예산 반영
- ▶ 교육부 국가시책 투자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 지원
- ▶ 재정 악화에 따른 전략적 건전 예산 편성으로 재정 효과성 제고

○ 예산 편성 규모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25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조 1,062억원 대비 772억원(7.0%) 증가한 1조 1,834억원

○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5년 예산		'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11,834	100.0%	11,062	100.0%	772	7.0%
중앙정부이전수입	8,828	74.6%	8,334	75.3%	493	5.9%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008	8.5%	1,036	9.4%	△28	△2.7%
기 타 이 전 수 입	11	0.1%	11	0.1%	0	4.1%
교수학습활동수입	2	0.0%	3	0.0%	0	△19.2%
행 정 활 동 수 입	3	0.0%	5	0.0%	△1	△26.8%
자 산 수 입	0	0.0%	0	0.0%	0	순감
이 자 수 입	12	0.1%	12	0.1%	0	0.0%
기 타 수 입	1	0.0%	1	0.0%	0	8.7%
전 년 도 이 월 금	65	0.5%	50	0.5%	15	30.0%
전 입 금	1,900	16.1%	1,606	14.5%	294	18.3%

- ▶ (이전수입) 기정예산액 9,383억원 대비 465억원 증가한 9,848억원
 - 중앙정부이전수입(493억 26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8억 38백만원), 기타이전수입(47백만원)
- ▶ (자체수입) 기정예산액 22억원 대비 2억원 감소한 20억원
 - 교수학습활동수입(△59백만원), 행정활동수입(△1억 45백만원), 기타수입(10백만원)
- ▶ (기타) 기정예산액 50억원 대비 15억원 증가한 65억원
 - 전년도이월금(15억원)

○ 세출예산(정책사업별)

(단위 : 억원, %)

구 분	'25년 예산	구성비	'24년 본예산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834	100.0%	11,062	100.0%	772	7.0%
인 적 자 원 운 용	104	0.9%	98	0.9%	6	6.0%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775	6.6%	618	5.6%	157	25.3%
교 육 복 지	674	5.7%	564	5.1%	110	19.6%
보 건 급 식	396	3.3%	404	3.7%	△8	△2.0%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1,217	10.3%	1,098	9.9%	119	10.8%
학 교 시 설 여 건 개 선	682	5.8%	1,192	10.8%	△510	△42.8%
평 생 교 육	8	0.1%	7	0.1%	1	12.0%
교 육 행 정 일 반	299	2.5%	276	2.5%	22	8.0%
기 관 운 영	416	3.5%	217	2.0%	199	91.6%
재 무 활 동	110	0.9%	110	1.0%	0	0.8%
예 비 비 및 기 타	43	0.4%	61	0.6%	△17	△29.0%
인 건 비	7,106	60.0%	6,412	58.0%	693	10.8%

- ▶ (인적자원운용)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98억원 대비 6억원 증가한 104억원
 - 교직원복지(41억원), 교직원인사(36억원), 교직원역량강화(25억원)을 반영함
- ▶ (교수학습활동지원)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618억원 대비 157억원 증가한 775억원
 - 학교정보화(296억원), 교육과정운영(137억원), 특수교육(65억원) 등을 반영함
- ▶ (교육복지) 전년도 본예산액 564억원 대비 110억원 증가한 674억원
 - 교육복지지원(545억원), 방과후학교및돌봄교실(109억원), 학비지원(19억원)을 반영함

- ▶ (보건급식) 전년도 본예산액 404억원 대비 8억원 감소한 396억원
 - 보건관리(57억원), 급식관리(338억원)을 반영함
- ▶ (학교재정지원관리) 전년도 본예산액 1,098억원 대비 119억원 증가한 1,217억원
 - 학교운영비지원(1,162억원), 사학재정지원(54억원)을 반영함
- ▶ (학교시설여건개선) 전년도 본예산액 1,192억원 대비 510억원 감소한 682억원
 - 학생배치시설(298억원), 학교시설개선(384억원)을 반영함
- ▶ (평생교육) 전년도 본예산액 7억원 대비 1억원 증가한 8억원
 - 평생교육운영(6억원), 독서문화(2억원)을 반영함
- ▶ (교육행정일반) 전년도 본예산액 276억원 대비 22억원 증가한 299억원
 - 재무관리(94억원),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79억원), 시설사업관리(53억원) 등을 반영함
- ▶ (기관운영) 전년도 본예산액 217억원 대비 199억원 증가한 416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363억원), 기본운영비(52억원)을 반영함
- ▶ (예비비및기타) 전년도 본예산액 61억원 대비 17억원 감소한 43억원
- ▶ (인건비) 전년도 본예산액 6,412억원 대비 693억원 증가한 7,106억원
 - 공무원인건비(5,424억원), 근로자인건비(1,681억원)을 반영함

□ 기금운용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2025년 계획		전년도 당초계획		증감액	
	계	구성비	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98	100.0%	3,236	100.0%	△1,838	△56.7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25	80.47%	2,731	84.39%	△1,606	△58.8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73	19.53%	505	15.61%	△232	△45.94%

02

재정이슈

- ① 2024년 총수입·총지출 마감 및 보통교부세 감소 분석
- ② 2025-2029 자치단체 채무관리계획 분석
- ③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성과와 과제
- ④ 재정 뉴스

01. 2024년 총수입·총지출 마감 및 보통교부세 감소 분석

출처·링크 [모두의 나라살림 \[나라살림 421호, 422호\]](#)

□ 2024년 국세 세입 감소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4.3조 원 줄어들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경기 둔화 예측 실패와 감세 정책 영향 과소평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추계 개선, 지방교부세 조정 방식 개편, 추경 편성 강화 등의 대응 필요

□ 2024년 세입·세출 마감 개요

- 2024년 총수입·총지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국세 수입 결산액 336.5조 원으로 예산 대비 30.8조 원(8.4%) 감소함. 2023년 대비 7.5조 원 줄어들었으며, 2년 연속 극심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임
- ▶ 1990년 이후 국세 수입이 감소한 해는 IMF 경제위기(-3%), 금융위기(-1.7%), 코로나19(-2.7%) 등 단 4번뿐이었으며, 이번 2023~2024년의 15% 감소는 사상 최악 수준임
- 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응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불용액을 증가시켜 재정을 조정함
- ▶ 2024년 국세 수입 주요 세목별 감소는 법인세(-19.5%), 소득세(-6.6%), 개별소비세(-15.1%)에서 두드러졌으며, 부가가치세(+1.0%)만 소폭 증가함
- ▶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4.3조 원 감소했고, 조정률이 0.7501에서 0.696으로 하락함

□ 세수 감소 원인 분석

- (낙관적 경제 전망 오류) 정부는 경기 회복을 예상하고 ‘상저하고’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세수를 추계했으나, 실제로 하반기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세수가 견힘.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가 후행적으로 반영되는 지표라서,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낙관적 세수 전망을 설정한 것이 문제였음

- (감세 정책 영향 과소평가) 정부 감세 정책(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감면 등)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기재부가 감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본예산에 보수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 (세수 추계 방식 문제) 3분기 기업 실적 반영한 ‘rolling forecast’ (세수추계 업데이트) 방식을 활용하지 않아 세수 예측 정확도가 낮았음. 정부가 국회 제출한 세수 예측치는 2023년 7월 말 기준이었으며, 11월 이후 경제 지표를 반영한 재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 보통교부세 감소 및 지방재정 영향

- (보통교부세 4.3조 원 감소) 내국세 세입 감소로 보통교부세 4.3조 원(7.3%) 삭감됨.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구조이므로, 국세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024년 내국세 결산액이 예산 대비 23.4조 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정부 예산 운용이 어려워짐
- (정부의 임의적 감액 문제) 기재부는 지방교부세 감액분 중 50%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026년에 정산할 계획이지만, 이는 지방 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임. 추경을 통하지 않은 임의적인 보통교부세 감액은 자치단체 세입예산의 예측력을 떨어뜨려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 ▶ 또한, 법적으로 국세 변동에 따른 교부세 조정은 다음다음 연도(2026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가 이를 당해 연도(2024년)에 감액한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음
- (조정률 하락과 지방 재정 압박) 국세 수입의 대규모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0.7501에서 0.696으로 하락하면서 지자체 재정 운영에 어려움 발생. 조정률 하락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할 필수 경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특히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 타격이 큼

□ 개선방안

- 세수 추계 시 3분기 기업 실적 반영하는 ‘rolling forecast’ 방식 도입 필요. 법인세 등 후행 지표 예측 모델 개선해야 함

- 지방교부세 감액을 임의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2026년 까지 정산하는 방식 유지해야 함
 - ▶ 지방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저 조정률 제도 도입하여, 지방정부 필수 재정 부족액 일정 수준 이상 보장 필요
- 국세 수입 변동이 예상될 경우 공식적인 추경을 통해 대응하고, 지방정부 예산 감액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시행하여 재정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 안정적 예산 운영을 보장해야 함

□ 결론

- 2024년 총수입·총지출 마감 결과는 국세 수입 감소와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중앙·지방 재정 운용에 큰 영향 미침. 특히, 세수 감소 주요 원인은 경기 둔화 예측 실패, 감세 효과 반영 부족, 세수 추계 방식 문제로 분석됨
- 지방재정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보완책을 마련하고, 세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함

02. 2025-2029 자치단체 채무관리계획 분석

출처·링크 [모두의 나라살림 \[나라살림 432호\]](#)

□ 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계획은 대부분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실행이 부족. 이에 따라 채무관리계획의 실효성 강화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 필요

□ 개요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채무관리계획(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채무부담비율이 35% 이상인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만 채무관리계획을 공개
- 각 자치단체는 채무 상환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주요 문제점

- 전국적으로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2024회계연도 채무를 상환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음
 - ▶ 2024년 순세계잉여금을 2025년 조기상환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 곳은 부산광역시 한 곳뿐
- 많은 지자체가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실제 실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 활용 계획조차 세우지 않음
 - ▶ 적립 계획을 세운 경우에도 결산서나 예산서에서 구체적인 활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움

□ 주요 채무 현황

- 관리채무 부담 비율이 높은 지자체:
 - ▶ 광주(50.95%), 대구(49.17%), 부산(48.28%), 서울(44.9%)
 - ▶ 세종특별자치시: 관리채무 부담비율 35.23%, 채무상환비율 5.45%

[세종시의 채무관리]

- 세종시는 2023년 대비 2024년 채무 64,549백만 원 증가
 - ▶ 원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213억 원), 교부세 감소(37억 원), 2023년 가용재원 사용 증가(2,705억 원) 등
- 2025년 지방채 추가 발행액 1,095억 원, 상환액 563억 원, 2025년 말 채무 예상 잔액 4,865억 원
- 2025~2029년 주요 채무사업:
 - ▶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2025년 97억, 2026년 222억, 2027년 222억)
 - ▶ 재해예방·복구 사업 (2025년 461억, 2026~2029년 총 1,050억)
 -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2025~2029년 약 810억 원)
- 순세계잉여금 활용 계획 미비
 - ▶ 세종시는 2023년, 2024년 모두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활용하지 않음
 - ▶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하더라도 실제 활용이 불분명하여, 계획과 실행 간 괴리가 있음

※ 자료 : 2025-2029년 세종 채무관리계획

□ 시사점

- 순세계잉여금 활용 실효성 확보 필요
 - ▶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채무상환 적립금으로 기록되지만, 실제 사용 내역은 불명확
 - ▶ 실제 채무 상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세종시의 채무 증가 방지 및 재정 건전성 확보
 - ▶ 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방채 발행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
 - ▶ 재해예방, 산업단지 조성 등 필수 사업에 대한 적절한 자원 배분이 필요
- 지방채 및 채무 적립금 추적 시스템 도입
 - ▶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실질적으로 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 결산서 및 예산서에 채무상환 적립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결론

- 세종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적립’이라는 명목으로만 기록하고 있음
- 채무관리계획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개선 효과는 미흡
- 제도 개선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실제 채무상환 활용을 강화하고, 채무상환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03.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성과와 과제

출처·링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Brief(2025.02.)

□ 지난 1월 22일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시행 2년 차의 기부실적을 분석하여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고자 함

□ 2024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결과

○ 전년도 모금실적을 크게 상회

- ▶ 작년 한 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총 모금액은 879억 3천만원(전년대비 35% 증가)이고, 기부 건수는 77만 4천건(전년대비 47% 증가)임
- ▶ 17개 시도 모두 전년 대비 모금액과 건수가 증가함
 - 전반적으로 도(道) 지역의 모금 규모가 광역시를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2023년 대비 증가율은 대전(317%), 광주(299%), 세종(206%)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상위 10개 기초지자체(제주·세종 포함)의 평균 모금액은 17억 4천만원으로 2023년도 11억 4천만원과 비교해 53% 증가함

〈 시도별 모금액 및 건수 〉

(억 원, 천 건)

지자체	'24년			'23년		지자체	'24년			'23년	
	모금액	전대비	건수	모금액	건수		모금액	전대비	건수	모금액	건수
합계	879.3	135%	774	650.6	526	경기	53.6	137%	54	39.1	41
서울	31.2	126%	31	24.8	27	강원	69.9	132%	62	52.9	44
부산	19.5	153%	18	12.7	15	충북	42.7	137%	36	31.1	22
대구	8.9	118%	8	7.5	9	충남	63.5	147%	61	43.2	38
인천	10.2	131%	10	7.7	9	전북	93.2	110%	73	84.8	64
광주	45.3	299%	43	15.2	13	전남	187.5	131%	157	143.4	93
대전	19.9	317%	20	6.3	6	경북	103.9	115%	87	90.0	66
울산	15.2	155%	13	9.9	9	경남	75.9	121%	63	62.5	52
세종	3.0	206%	3	1.5	2	제주	35.9	197%	34	18.2	17

○ 2024년도 운영 결과의 주요 특징 및 성과

- ▶ 연말 기부 집중 현상(12월 모금액 49.4%로 전년대비 9.3%p 증가)이 더욱 뚜렷해지고, 20·30대 기부자 비율(20·30대 기부자는 45.5%로 전년대비 7.9%p 증가)이 늘어남

-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기부한 비율이 2.8%p 증가, 주요 거점 광역시의 경우 주로 인근 도(道) 내 지역으로 기부하는 경향이 공통으로 확인됨
- ▶ 지자체 간 상호기부가 기초지자체의 기부금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됨
 - 전남 광양시-경북 포항시 간의 상호기부로, 광양에서 포항으로 기부한 사례(2억 6천만원)와 포항에서 광양으로 기부한 사례(2억 5천만원)가 기부금 기준 4위와 5위에 나란히 오름
- ▶ 소외지역 재정여건 강화
 - 89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모금액이 그 외 137개 지자체 평균 모금액의 1.7배 수준
 - 비수도권 지자체 평균 모금액은 수도권 지자체 평균 모금액의 3.3배 수준
- ▶ 답례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확대
 - 2024년 답례품 구매비용은 205억원으로 2023년 151억 대비 36%가량 증가
 - 지자체가 발굴한 답례품 품목은 14,989건으로 전년대비 3천건 이상 증가했고, 지역 특산품에 편중되지 않고 관광·체험 상품 등으로 다양해짐
- ※ (전북 김제) 벽골제 마을 숙박 할인권, (경남 통영) 통영 밤바다 투어 체험권
- ▶ 기금사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가능성 확인
 - 지자체의 특정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도입('24.6.)
 -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부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복구비용 마련

□ 해외 성공사례와의 비교

- 일본은 2008년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고향납세제를 도입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음
 - 제도 시행 첫해에는 약 81억엔(한화 약 800억원)을 모금하였고, 16년이 경과한 2023년 한 해 동안 130배 이상 증가한 약 1조 1,175억엔(한화 약 10조 3천억원)을 거둬들임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톡톡히 발생함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저조한 성장세를 보인바, 시행 2년차의 경우 전년도보다 줄어든 모습(전년대비 95% 수준)을 나타냈으며 제도 시행 5년차 역시 제도 시행 첫해의 약 28% 늘어나는 데에 머물렀음
 - 이에 반해 2년차에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서 거둬들인 총 모금액은 전년대비 35%나 증가한 모습을 보임

□ 시사점

- ▶ 추가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현재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로 한정된 100%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액을 점차 2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개인들의 추가적인 기부를 유도해야 함
 -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부에 대해서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 지나친 조급함 지양
 - 15년 앞서 시행된 일본 고향납세제의 운영 결과와 단순 비교하며 우리나라 지자체의 모금실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음. 그러나, 지나친 조급함으로 인해 자칫 현재의 성장세를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

의정활동 정책제언

- 시행 2년차에 기부 건수가 47%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자주, 더 많이 기부하는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지자체도 지역을 브랜딩하고 세일즈 해야하는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임. 그러나, 지자체만이 운영의 주체가 아니라 지역 생산자, 나아가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제도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함
- 장기적으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부자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단순히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부자가 공감하는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결국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모금할 것인지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함

04. 재정 뉴스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5% 혜택 유지** ([행정안전부 2025. 1. 13.](#))
- **2025년에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 제공**
 -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세종시교육청, 재정집행 목표 4년 연속 달성 쾌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5. 1. 14.](#))
- **상반기 소비·투자 분야 10억원, 1년간 재정집행 분야 50억원 확보**
 - ▶ 소비·투자 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3,790억원 대비 107억원 초과한 3,897억원을 집행하여, 2025년도 보통교부금 장려금 10억원을 추가로 확보
 - ▶ 1년간 1조 1,765억원의 예산 중 1조 1,235억원을 재정집행한 결과로 2026년도 보통교부금 50억원을 추가로 확보
- **2021년부터 본격 시행한 재정집행 목표를 2024년까지 4년 연속 달성하여 총 330억원의 보통교부금 장려금을 확보**
 - ▶ 2025년 2월 말까지 진행하는 2024학년도 학교회계 집행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30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
- **예산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5년에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 **2024년 사전 예방적 감사로 예산 102억원 절감** ([세종특별자치시 2025. 1. 17.](#))
- **세종시 감사위원회, 주요사업 570건 일상감사·계약심사 실시**
 - ▶ 지난 한 해 주요사업 570건 총 2,761억 원 규모를 심사해 3.7%에 해당하는 총 102억원의 예산을 절감
 - ▶ 감사대상은 세종시 본청과 교육청, 사업소, 공단, 공사, 출자·출연 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3억원 이상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등임
- **올해 상반기 중 지난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 감사를 실시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

□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17개 시·도 9천 856억원 교부 [\[행정안전부 2025. 1. 23.\]](#)

○ 소방공무원 인건비 5천476억원, 소방·안전분야 사업비 4천 380억원 교부

- ▶ 소방안전교부세 9천 856억원 중 5천 476억원(전년대비+172억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천 380억원(전년대비+137억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

○ 사업비는 일반수요(3천 822억원)와 특수수요(558억원)로 나뉘며, 세부 교부기준에 따라 각 시·도에 교부

- ▶ 일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반영해 산정하며,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노후 소방관서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 소방 현장 대응 및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사용
- ▶ 특수수요 사업비 교부액은 각 시·도가 제출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산정함. 올해는 ▲소방헬기(311억원) 및 소방선박(86억원) 도입, ▲보행환경 정비(82억원), ▲안전체험관 건립(59억원) 등에 사용

○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분야에 투자가 더욱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2025. 2. 6.\]](#)

○ 정부는 '25. 2. 28.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 4. 30. 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이를 위해 '25. 2. 7. (금)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 ▶ 개정안은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임.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22원/리터(ℓ), 경유 △133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47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10.31.	'24.11.1. ~ '25.4.30.
		△20%	△30%	△37%	휘발유△25% 경유△37% 부탄△37%	휘발유△20% 경유△30% 부탄△30%	휘발유△15% 경유△23% 부탄△23%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698(△122)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448(△133)
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156(△47)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 2025. 2. 10.](#))

○ **총세입은 535.9조원, 총세출은 529.5조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원에서 이월액 4.5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조원으로 확정**

▶ 총세입은 535.9조원으로 예산(550조원)대비 14.1조원 감소

▶ 총세출은 예산현액 554조원 중 529.5조원을 집행

▶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0.4조원, 특별회계에서 1.6조원이 발생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¹⁾에 따라 국무회의(4월)를 거쳐 처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 처리

○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총세출 529.5조원과 이월액 4.5조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1조원으로 집계**

▶ 이 중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 6.5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4.3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은 9.3조원 수준

▶ 특히, 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인한 예비비 불용(2.5조원)을 제외하면 사업비 불용은 6.8조원으로 전년(7.5조원)보다 낮은 수준

□ **세종시, 400억 규모 세종미래전략산업펀드 결성** ([세종특별자치시 2025. 2. 26.](#))

○ **26일 시-세종TP-JB인베스트먼트, 지역투자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 ▲시 소재 우수기업 및 관외에서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우수기업 발굴·투자 ▲시 소재 또는 이전 예정 기업 대상 투자 컨설팅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등에 협력

▶ 미래전략산업펀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펀드운용사 선정, 투자자 모집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2월 21일 미래전략산업펀드 투자조합 결성까지 완료

○ **세종시 20억·민간 380억 출자, 40억원은 지역 기업에만 투자**

▶ 한국벤처투자(한국모태펀드)의 문화계정 출자펀드와 연계해 시가 20억 원, 민간 380억 원을 각각 출자한 400억원이며 앞으로 8년간 운용되며, 이 중 시 출자금의 2배인 40억원은 세종시 소재 또는 이전 예정 기업에만 투자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집중할 예정

1)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계잉여금 처리 및 사용계획을 규정(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 **3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원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 2025. 2. 28.](#))

○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500억원, 20년물 100억원**

- ▶ 오는 3월부터는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5년물이 새롭게 발행되며, 1인당 연간 구매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 ▶ 표면금리는 2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85%, 10년물 2.840%, 20년물 2.705%)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물은 0.35%,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

□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기획재정부 2025. 3. 5.](#))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
- ▶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 됨.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
- ▶ 대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폭넓게 지원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 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하여 충당할 계획**

□ **2025년 지방예산 현황 발표** ([행정안전부 2025. 3. 11.](#))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순계, 일반 +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약 15조 9천억원(5.1% ↑) 증가한 326조원**

- ▶ 세입재원별로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145조 6천억원, 이전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이 150조 9천억원, 보전수입 등이 23조 6천억원, 지방채 5조 9천억원임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동일하며, 재정자주도는 70.3%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0.6%p)**

※ 재정자립도(%): ('21) 48.7 → ('22) 49.9 → ('23) 50.1 → ('24) 48.6 → ('25) 48.6

재정자주도(%): ('21) 70.8 → ('22) 73.4 → ('23) 74.1 → ('24) 70.9 → ('25) 70.3

03

재정정책

- ① 2024년 광역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분석 및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사항
- ② 지방세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에 관한 연구
- ③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
- ④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01. 2024년 광역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분석 및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사항

출처·링크 **모두의 나라살림**, [나라살림 제423·425호]

-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사항을 살펴, 성과평가 기준 강화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 방안을 제시

□ 개요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개인에게 교부하는 재원으로,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리 감독이 필수적임.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2025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행
- 본 보고서는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와 2025년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종합 분석하여, 세종시를 포함한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 (유지필요성 평가 미실시) 서울, 충남, 전남, 경북 등 4개 지자체는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유지필요성 평가 미실시는 지방보조사업 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유지필요성 평가 미실시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명확히 적용할 계획
- (성과평가 등급 조정 미흡) 성과평가는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5%), 미흡(10%), 매우미흡(5%)의 상대평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미준수
 - ▶ 대전(매우우수 49%), 경남(매우우수 5%) 등 과도한 온정적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 다수 발생

- ▶ 미흡·매우미흡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를 조정하여 실질적인 성과 평가 기능이 저해됨
- (지방보조금 규모 및 사업 수) 총 2조 3,821억 원의 지방보조금이 집행됨. 서울(9,489억 원), 제주(3,426억 원), 부산(1,167억 원)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음
- ▶ 사업 수는 제주(2,846건), 울산(756건), 대구(641건)이 가장 많았으며, 경북(192건), 경기(337건), 충남(328건), 세종(230건)이 적었음

□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주요 내용

① 운용평가 상대평가 준수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적용

- ▶ 성과평가 비율 준수 시 지방보조금 한도액 증액 가능(인센티브). 성과평가 기준 미준수 시 한도액 동결(패널티)
- ▶ 행정안전부가 평가 비율 준수를 직접 관리하며, 미흡·매우미흡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패널티 적용 가능

② 지방보조사업 특성별 평가 기준 도입

-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법정운영비보조 등 사업별 특성에 맞춘 평가 기준 적용. 예를 들어,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행사의 연례성 및 주민 만족도 반영, 법정운영비보조는 운영비 사용 적정성 및 정산검사 철저 수행

③ 기금 재원의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

- ▶ 기존에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기금 재원 보조사업도 2025년부터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적용.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필수화, 예외 없이 관리기준을 적용해야 함

④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 ▶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감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 부정수급 의심 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30일 내 점검을 완료해야 함. 행정안전부 점검 결과와 지자체 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행정안전부가 재검토 요청 가능

□ 시사점

- 2024년 평가 결과에서 일부 지자체가 상대평가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이는 2025년부터 직접적인 패널티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미흡·매우미흡 평가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의 온정적 평가를 지양해야 함
- 유지필요성 평가 미실시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조치할 가능성이 높아, 평가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
- 기존에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사업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 이에 따라 지자체는 기금 사업의 편성 및 운용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
- 행정안전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자체는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 평가 기준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변경된 만큼, 지자체는 각 유형별 평가 기준을 정리하고, 내부 지침을 보완할 필요
-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면밀한 검토 필요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 및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평가체계 구축 필요

□ 결론

- 2024년 광역 시·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와 2025년 개정된 관리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를 엄격히 적용하고, 관리 기준 미준수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상대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필요성 평가를 철저히 수행하며, 부정수급 관리 및 기금 사업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02. 지방세 체납세액의 효율적 징수에 관한 연구

출처·링크 [한국세무사회, 연구보고서\(통권 제38호-5\)](#)

□ 지방세 체납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

□ 지방세 체납세액 현황

○ 지방세 체납 규모 및 증가 추세

- ▶ 지방세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총 체납세액이 1조 9,124억 원에 달함
- ▶ 주요 체납 세목: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이 체납 비중이 가장 높음
- ▶ 체납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 체납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침
- ▶ 체납 원인: 경제적 어려움, 고의적 납부 회피, 조세 불복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

○ 현행 체납 징수 제도

- ▶ 임의징수: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 ▶ 강제징수: 재산 압류,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사업 제한 등 통해 체납액을 징수
- ▶ 그러나 강제징수 과정에서 압류재산 관리 미비, 징수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

□ 체납징수 국내 우수사례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신설

- ▶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38세금징수과’ 신설·확대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과 제재로 징수율을 크게 향상
- ▶ 서울시 징수율은 2018년 79.5% → 2021년 93.6% → 2022년 92.2%로 증가
- ▶ 가택수색, 출국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 신규 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체납자 대응을 강화, 그 결과 지방세 체납율이 줄어들고, 서울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 성남시 체납 실태조사반 운영

- ▶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체납 문제 해결 추진
- ▶ 기존 우편 고지 방식 대신 직접 방문 체납 사실을 안내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도입
- ▶ 소액 체납자는 방문 안내를 통해 체납 사유 상담 및 분할 납부 안내, 성실 납세자는 공평 과세에 호응하며, 조사반 운영을 통해 성남시는 납세 의식 강화 효과

□ 해외 우수사례

○ 미국 사례

- ▶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세제를 운영, 통일된 재산세 징수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 지방세 체납 증가와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부터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
- ▶ 캘리포니아 주: 1986년부터 180일 이상 연체된 개인소득세, 법인세, 은행세 등을 민간에 위탁
- ▶ 메릴랜드 주: 1993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징수되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180일 이상 체납자 대상)을 민간채권 추심회사에 위탁

○ 일본 사례

- ▶ 민간 독촉업무 위탁: 체납처분 업무는 제외하고, 체납세 독촉 및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징수율 제고
- ▶ 오사카부 사카이시는 10만엔 미만 소액 체납자(약 2만 9000명, 총 6억 7000만 엔)의 시민세·고정자산세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화 독촉을 통한 징수

□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점

- ▶ (전문 체납징수조직의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징수조직과 인력이 부족, 공무원 1인당 연간 1,352건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 체납자 방문, 독려, 복지기관 연계 등 징수활동이 어려운 실정
- ▶ (압류재산 관리시스템 부재) 압류재산 관리 미흡으로 공매 지연·불가 사례가 증가, 징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국세 선압류, 근저당권, 가등기 등의 문제로 강제환가가 어려워 장기간 방치 경우가 많음

- ▶ (담세력이 없는 채권의 장기 체납) 지자체의 장기체납은 지방소득세·자동차세에서 주로 발생, 담세력 부족과 채권 확보 어려움이 주요 원인, 징수부서의 업무 과중과 순환보직 구조로 제도 개선이 어려운 실정
- ▶ (소액 체납자 관리 시 행정비용 과다) 가장 큰 문제는 다양한 세목과 다수의 소액 체납 건으로 안내문 발송, 전화통화, 등 관리비용이 크게증가, 징수인력 부족, 예산 제약

○ 개선방안

- ▶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체납전문부서 운영) 기초자치단체의 징수 인력·조직 부족 해결을 위해 광역단위 체납전문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서울시 38세금징수와 사례를 참고해 체납자 재기 지원 등 사회적 기능까지 수행해야 함
- ▶ (체납조세채권의 압류권 양도 및 유동화) 미국처럼 체납조세채권을 민간에 양도하거나 유동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징수 효율성을 높일 필요 있으며, 공공기관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채권을 민간 채권추심업체나 투자기관에 매각하여 회수율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 (공매절차 진행기준의 제도화) 장기 체납액은 담세력 부족으로 발생하며, 공매 기준이 불명확해 절차 지연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체납금액·체납기간을 고려한 조례 제정으로 임의 조정을 방지하고 공매 절차를 효율화해야 함
- ▶ (민간 중심의 납세지원단 구성) 민간 중심의 납세지원단을 도입하여 소액 체납자의 실태조사, 맞춤형 납부 안내, 복지 연계 등을 강화하면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시사점

- ▶ 지방세 체납 증가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전담 조직 부족, 압류재산 관리 미흡, 장기·소액 체납 증가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전문부서 운영을 통한 체계적 징수 관리가 필요
- ▶ 미국과 일본은 체납세액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참고해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일본은 단순 독촉 업무에 한정되지만, 한국은 IT 수준을 고려해 위탁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음. 또한, 성남시의 민간 납세지원단 운영 사례를 활용하면 체납 징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03.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2025.3.7.\)](#)

□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 혜택과 부담을 조정해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활용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산세 감면, 공공 활용 시 세 부담 완화, 장기 방치 시 추가 부담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

□ 빈집 현황 및 관련 지방세 제도

○ 빈집의 정의 및 현황

- ▶ 최근 한국 사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전국 빈집이 153만 5천 호(7.9%)에 달해 지역경제 침체와 범죄·화재 위험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남
- ▶ 빈집은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안전·위생·경관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령할 수 있음
- ▶ 정부 차원의 전면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도입 등 세제 지원 방안이 시급히 필요

○ 빈집 관련 지방세 제도

- ▶ 빈집을 소유하면 매년 재산세(주택분)를 부담해야 하며,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더 높은 세율의 재산세(토지분)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음
- ▶ 문제는 토지분 세율이 주택분 세율보다 높아서, 철거 후 세금이 오히려 증가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빈집 철거 후 나대지에 대한 세 부담을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5년간 유지하도록 함
- ▶ 그러나, 여전히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철거 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함

□ 해외 주요국 사례

- (미국) 일부 도시는 빈집이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세 부과 (오클랜드: 1년 중 50일 미만 사용된 주택, 버클리: 1년 중 182일 이상 방치 주택에 부과)

- **(캐나다)** 외국인 투자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 빈집이 증가하면서 주택난이 심화, 이에 따라 주요 도시에 빈집세 도입(1년 중 6개월 이상 빈집에 부동산 과세표준액의 0.5~3% 부과)
 - **(영국)**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를 시행
(일시적: 지방정부가 재산세 0~100%감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재산세 200~400% 중과)
 - **(프랑스)** 대도시 주택 불균형 해결을 위해 1년 이상 빈집에 세금 부과
(중앙정부는 빈집 연간 세금 부과, 지방정부는 빈집 거주세를 임대료 수준으로 자율 부과)
 - **(일본)**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로 인해 빈집 문제가 심화
(위험성이 높은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지정하여 철거 및 정비를 유도)
- ☞ 각국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감면과 중과세 정책을 병행하여, 자발적인 철거와 정비를 유도

□ 세종시 사례

○ 세종시의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

- ▶ 세종미래마을 조성(빈집정비): 세종미래마을 지구 내 빈집을 철거·보수 한 후 공공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역의 혐오시설인 빈집을 정비해 안전을 확보하고, 부지를 공공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것
- ▶ 농촌빈집정비사업: 농촌 읍·면 지역의 빈집을 정비·철거하고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및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
- ▶ 세종시는 '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전국 최초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빈집 소유자가 주택 멸실 후 3년간 재산세 50% 감면, 공용 활용 시 5년간 면제를 받도록 함
 - 건축사회와 협약, 빈집 해체 계획서 검토 비용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빈집 정비 규제를 개선해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 향후 과제

○ 재산세 감면으로 빈집 정비 촉진

- ▶ 2024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되었으나, 재산세(토지분)가 여전히 높아 철거 유인이 부족

-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을 도입하거나,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고려
- ▶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공원·텃밭 등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면 일정 기간 재산세를 50~100% 감면하거나, 철거 전 주택 세액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가능

○ 위험 빈집 정비와 빈집세 검토

- ▶ 위험 빈집 정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명령 후 장기 방치된 빈집에 추가 재정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조례를 통해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식
- ▶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철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후에도 효과가 미흡할 경우, 빈집세 도입을 논의할 수 있음. 다만, 빈집세는 증세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통계 및 원인 분석,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빈집 정비의 중요성과 정책적 시사점

- ▶ 빈집 정비는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으로, 방치된 빈집이 도시미관 저해, 범죄·화재 위험, 주민 불안을 초래하지만, 정비 후 공공·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귀농·귀촌 유입, 지방소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 이를 위해 지방세 감면, 철거비 지원, 공공 활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빈집 정비가 단순한 규제나 철거 지원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 모델로 자리 잡도록 적극적인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특히,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소유주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빈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정비와 활용이 촉진되도록 해야 함
- ▶ 궁극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집 발생 예방 및 재활용까지 고려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

0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2025.1)

□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인구구조변화 전망

- ▶ (총인구) 통계청(2024)의 중위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2년 총인구는 5,167만명에서 2024년까지 5,1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52년에는 4,62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 (생산연령인구)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명(71.1%)에서 2052년 2,380만명(51.4%)으로 향후 30년간 1,294만명(-35.2%) 감소할 전망
- ▶ (고령인구)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8만명(17.4%)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1,891만명(40.1%)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이후 감소하여 2052년에는 1,886만명(40.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 (유소년인구 및 학령인구) 전국의 유소년인구(0~14세)는 2022년 595만명(11.5%)에서 2035년 374만명(7.4%)으로 감소하며, 2052년에는 361만명(7.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부양비)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2년 전국 평균 40.6명(유소년 16.2명, 고령자 24.4명)에서 2052년 94.4명(유소년 15.2명, 고령자 79.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변화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 ▶ (세입측면) 지방세 과세대상 축소와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 하락으로 지방세입 감소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성 하락, 소비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초래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소득, 소비, 자산거래 및 보유와 관련된 지방세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 (세출측면) 고령인구 비율 증가로 사회복지지출 증가, 일반 행정비와 경제개발비 증가
 - 인구가 감소할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위비용 증가

- ▶ (지방교육재정) 총수입액은 학령인구수와 직접 연관성이 낮음
 - 교육 수요와 관계없이 내국세 및 지방세 규모에 따라 총량이 결정됨
 - 인구 전망에 따라 향후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할 경우, 학령인구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크게 증가 할 수 있음

□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지방재정 대응 방안

○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재정 부담 관계 재설정

- ▶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고려

○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와 협력 강화

- ▶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과 관련한 지방재정 지출 대상은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지출 대상은 줄어들고 있어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예산의 유사·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업무 협력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법정 전출금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고려
 - 지방재원과 지방교육재원의 공동사업비를 마련하고, 고등교육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 지방교육 관련 사업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 필요
 -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통합·운영하는 방식 검토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인구를 기준으로 재원 규모를 산정하고 지역 간 재정 조정을 수행함
 - 이러한 산정 방식은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공급에 투입되는 고정비용의 특성과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그 결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의 기준 재정 수요가 과소 산정될 수 있음
 - 향후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지방재정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반영한 재정 조정이 필요함

○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서의 수입-지출 균형제도 도입

- ▶ 중앙정부가 지방 의무지출을 유발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지역개발과 주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입-지출 균형제도(‘페이고(Pay-As-You-Go, PAYGO)’²⁾ 도입 고려
- 페이고 제도를 도입한다면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해 지방 의무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 세입 증대방안이나 지방 의무지출 축소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함

□ 시사점

-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 개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함
- 첫째,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재정 부담 관계를 재설정하여 내셔널미니멈에 해당하는 복지지출은 중앙정부에서 전담하도록 함
- 둘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둘을 통합하여 유연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 할 것
- 셋째,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재정조정제도 개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격차 문제를 완화 할 것
- 넷째, 중앙정부가 지방 의무지출을 유발하는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한 지역개발과 주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 현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함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됨. 다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이양할 경우, 선택권과 자율성도 함께 보장해야 할 것임

2)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입법에 의해 지출 증가나 세입 감소가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자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04

경제동향

① 정부 경제동향

- ▶ 내수 회복이 지연,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 지속
- ▶ 경기 하방 압력 증가

② 정부 재정동향

- ▶ 11월 누계 총수입 542.0조원, 진도율 88.5%

③ KDI 경제동향

- ▶ 생산 증가세 완만한 수준
- ▶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

④ 지역경제보고서 ('24년 4분기)

-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민간소비 등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
- ▶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주택매매 및 전세가 하락 지속

⑤ NABO 산업동향&이슈

- ▶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
- ▶ 건설경기 침체로 경기하방 입력 가중, 주력 산업의 수출 큰 폭 감소

⑥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 ▶ 12월중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
- ▶ 소비 및 투자는 지표별로 엇갈린 모습

01. 정부 경제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2월 최근 경제동향](#)

-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증가**
 - ▶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 ▶ 1/4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민생·경제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추진하고,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첨단전략 산업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

- **'24.1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 소매판매는 감소**
 - ▶ 생산은 광공업(전월비 4.6%, 전년동월비 5.3%), 서비스업(전월비 1.7%, 전년동월비 1.2%), 건설업(전월비 1.3%, 전년동월비 △8.3%)에서 증가하여 3차산업 생산(전월비 2.3%, 전년동월비 1.4%) 증가
 - ▶ 지출은 설비투자(전월비 9.9%, 전년동월비 13.1%) 및 건설투자(전월비 1.3%, 전년동월비 △8.3%) 증가, 소매판매(전월비 △0.6%, 전년동월비 △3.3%)는 감소
 - ▶ 소비자심리('25.1월 CSI 91.2(전월비 +3.0p)) 상승, 기업심리 실적(전산업 CBSI '25.1월 85.9(전월비 △1.4p))은 하락, 전망(전산업 CBSI '25.2월 85.4(전월비 +2.5p))은 상승
 - ▶ '24. 12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보합,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하락(전월대비 △0.2p)

- **'25.1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전환, 물가는 상승폭 확대**
 - ▶ '25. 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3.5만명 증가,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 '25.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상승('24. 12월 1.9% → '25. 1월 2.2%),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상승

- **'25. 1월 중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 국고채 금리 하락, 환율 하락**
 - ▶ '24. 12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은 상승폭 축소

02. 정부 재정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 11월 누계 총수입은 542.0조원, 진도율은 88.5%

- ▶ (국세수입) '24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7.5조원 감소한 336.5조원
 -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 증가,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는 감소에 따른 소득세(1.6조원)증가,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8.5조원)증가, '23년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17.9조원)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에 따른 법인세(△17.9조원) 감소, 수입액 감소 및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0.5조원) 감소
- ▶ (세외수입) '24년 세외수입은 기타경상이전수입(+0.4조원), 기타재산이자외수입(+0.4조원) 증가 등으로 전년(28.5조원) 대비 1.1조원 증가한 29.6조원
- ▶ (기금수입) 11월 누계 기금수입은 20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조원 증가

□ 11월 누계 총지출은 570.1조원, 진도율은 86.8%

□ 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8.2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53.1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3조원 적자

□ '24년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1조원 증가한 1,160.3조원

- ▶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69.4조원(발행 157.0조원, 상환 87.6조원), 외평채 잔액 0.3조원 증가, 주택채 잔액은 △2.0조원 감소하여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67.8조원 순증

□ '25.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3조원(경쟁입찰 기준 13.7조원)

- ▶ 1월 국고채 금리는 연준의 2025년 금리인하 폭 축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둔화 우려에 따른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연초 자금집행 수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
- ▶ 1월 국고채 발행량은 18.3조원, 1월 조달금리는 2.71%로 전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응찰률은 286%로 전월대비 하락
- ▶ 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8조원 순유입

03. KDI 경제동향

출처·링크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2월호](#)

□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

- ▶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되었으나, 건설업 부진에 기인하여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냄
- ▶ 다만,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 정국 불안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

□ 주요 경제지표

- ▶ (경기) 건설업 부진에 기인하여 생산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
- ▶ (소비)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 (설비투자) 반도체 관련 투자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회복세를 지속
- ▶ (건설투자) 건설기성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
- ▶ (수출) ICT 품목의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
- ▶ (노동시장)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 증가세의 둔화 흐름이 이어짐
- ▶ (물가) 최근 환율, 유가 등 변동성이 큰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미약한 내수가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
- ▶ (금융시장) 금융시장은 대내 불확실성의 영향은 축소되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변동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
- ▶ (부동산시장)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남
- ▶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우려는 더욱 확대

04. 지역경제보고서

출처·링크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12월호](#)

□ '24년 4/4분기 중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

- ▶ 반도체, 의약품이 소폭 증가한 반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기장비는 보합
- ▶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은 소폭 감소하였고, 부동산업은 보합

□ '24년 4/4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

- ▶ 민간소비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화 소비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 소비는 소폭 증가
- ▶ 설비투자는 전분기보자 소폭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전기장비가 증가하였으나 디스플레이와 철강은 감소하였고, 자동차 및 부품은 보합 수준을 유지
- ▶ 민간부문은 건설공사비 상승세 지속과 어려운 자금조달 여건에도 비주거용 착공면적이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은 지자체의 SOC 예산 집행액 확대에 증가

□ '24년 4/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 반도체가 소폭 증가하였고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전기장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부품, 철강은 보합 수준을 나타냄

□ '24년 4/4분기 중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 ▶ '24년 10~11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3만명 늘어나며 3/4분기(+1.7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
- ▶ 지역별로 세종·충남은 증가폭이 확대, 충북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대전은 감소폭이 확대

□ 주택매매 및 전세 가격 하락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 ▶ '24년 10~11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2% 상승하여 3/4분기(1.9%)보다 상승세가 둔화
- ▶ '24년 10~11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5% 하락하며 3/4분기(-0.02%)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
- ▶ 지역별로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충북의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대전은 전분기와 동일한 하락폭을 보임. 한편, 세종은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나 충남은 하락 전환됨

05. NABO 산업동향&이슈

출처·링크

[국회예산정책처, NABO 산업동향&이슈 \(제74호\)](#)

-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과 건설경기 침체로 경기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주력 산업의 수출 또한 큰 폭으로 감소**
- **12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 전월대비 2.3% 증가**
 -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4. 10월) 2.3 → (11월) △0.3 → (12월) 1.4
 -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4.10월) △0.3 → (11월) △0.3 → (12월) 2.3
- **12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5%, 전월대비 4.4% 증가**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 10월) 1.3 → (11월) 1.5 → (12월) 1.9
- **1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 전월대비 1.7% 증가**
 -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4. 10월) 2.1 → (11월) 0.9 → (12월) 1.2
 -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4. 10월) 0.5 → (11월) △0.2 → (12월) 1.7
- **1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381.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
 - ▶ 수출액(억달러): ('24. 10월)449.0 → (11월) 444.0 → (12월) 483.6 → ('25. 1월) 381.6
 -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 10월) 4.8 → (11월) 2.6 → (12월) 5.9 → ('25. 1월) △10.4
- **12월 배출권(KAU24) 총가는 전월대비 하락, 장내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 ▶ KAU 총가(원): ('24.10월) 12,550 → ('24. 11월) 11,400 → ('24. 12월) 9,490
 - ▶ KAU24 장내거래량(천톤): ('24. 10월) 3,140 → ('24.11월) 3,772 → ('24.12월) 29,955
- **12월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1%, 15.1% 하락, 비철금속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
 - ▶ 에너지 가격(전년동월대비,%): (10월) △15.6 → (11월) △9.1 → (12월)△3.1
 - ▶ 농산물 가격(전년동월대비,%): (10월)△13.7 → (11월) △12.9 → (12월)△15.1
 - ▶ 비철금속 가격(전년동월대비,%): (10월) 12.4 → (11월) 5.9 → (12월)3.5
- **1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07% 감소, 전월세가격지수는 0.05% 증가**
 - ▶ 주택매매(전월대비, %): ('24. 10월) 0.07 → (11월) 0.01 → (12월) △0.07
 - ▶ 주택전월세(전월대비, %): ('24. 10월) 0.15 → (11월) 0.11 → (12월) 0.05

06.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출처: 링크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5.2](#)

□ 2024년 12월중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으나 소비 및 투자는 지표별로 엇갈린 모습

세종지역 실물경제 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23년			2024년						
		연간	12월	4/4	연간	1/4	2/4	3/4	4/4 ^{P)}	11월 ^{P)}	12월 ^{P)}
제조업 생산	생산지수	-6.2	-2.2	-5.9	-0.2	6.5	-2.3	-2.0	-2.4	-4.9	-2.0
	출하지수	-2.3	-4.1	-2.4	-3.4	1.9	-2.8	-7.8	-5.1	-9.5	-2.0
	재고지수	8.8	8.8	8.8	-1.5	6.3	4.6	9.8	-1.5	2.8	-1.5
소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¹⁾	0.7	2.8	3.1	3.5	6.6	1.3	3.8	2.0	6.0	-1.4
	승용차신규등록대수	6.0	-0.8	1.5	-6.3	-2.0	-17.8	-12.5	8.2	0.9	19.8
투자	자본재수입	36.9	4.0	10.1	-2.3	9.5	-2.3	5.4	-19.9	-6.3	-7.7
	건축착공면적	-56.2	335.1	-66.6	61.0	-33.5	54.5	92.0	147.8	-17.7	302.5
	건축허가면적	-47.6	-4.2	-17.5	94.5	-25.7	325.7	-40.2	24.8	78.8	-41.9
대외거래	수출	-23.0	11.5	1.1	24.3	34.8	85.3	2.7	-15.5	-15.9	-14.7
	수입	-10.8	2.3	-9.3	12.2	28.4	-6.5	21.5	10.2	43.6	-22.7
고용	취업자수증감(천명)	10.8	2.9	5.1	2.3	1.9	-0.2	1.4	6.2	7.5	7.9
	고용률	64.6	62.8	64.0	65.2	63.3	65.6	65.8	66.0	66.4	65.3

주: 1) 매장면적 3천㎡ 이상, 불변지수(2020=100)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토교통부

- ▶ (제조업 생산) 2024년 12월중 세종지역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감소폭이 축소
- ▶ (소비) 2024년 12월중 세종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전년동월대비)는 감소 전환
- ▶ (설비·건설투자) 2024년 12월중 세종지역 자본재 수입(전년동월대비)은 감소폭이 확대
- ▶ (수출입) 2024년 12월중 세종지역 수출(전년동월대비)은 감소폭이 축소
- ▶ (고용) 2024년 12월중 세종지역 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는 증가폭이 확대
- ▶ (소비자물가) 2025년 1월중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24.12월 +2.3% → 25.1월 +2.7%)
- ▶ (주택가격) 2024년 12월중 세종지역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은 하락폭이 축소

세종지역 물가 관련 지표

(%)

	2023년			2024년							2025년	
	연간	12월	4/4	연간	1월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 ¹⁾	3.0	2.6	2.7	2.4	2.5	2.8	2.7	2.2	1.9	1.8	2.3	2.7
주택매매가격 ²⁾	-3.60	-0.26	-0.12	-5.68	-0.34	-2.32	-1.99	-0.79	-0.69	-0.28	-0.22	..
주택전세가격 ²⁾	-2.74	0.27	2.06	-4.14	-0.08	-2.14	-2.12	-0.37	0.45	0.18	0.35	..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대비. 단, 분기 및 연간은 전기말월대비 당기말월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05

재정통계

① 주요 경제지표

▶ 고용, 생산, 소비, 부동산, 수출입, 금융, 지역특성 통계자료

② 세종시 주요 통계

▶ 기본현황, 재정·경제,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설·교통, 소방·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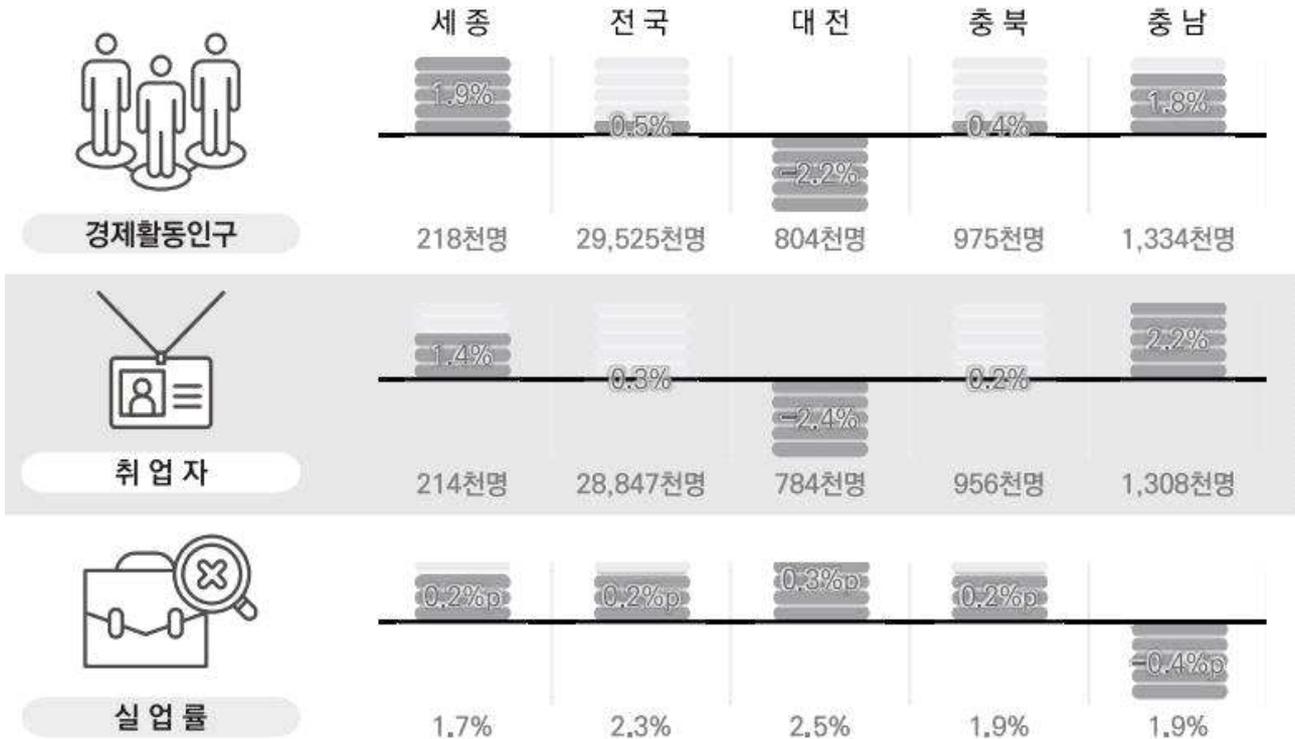
③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입학자, 졸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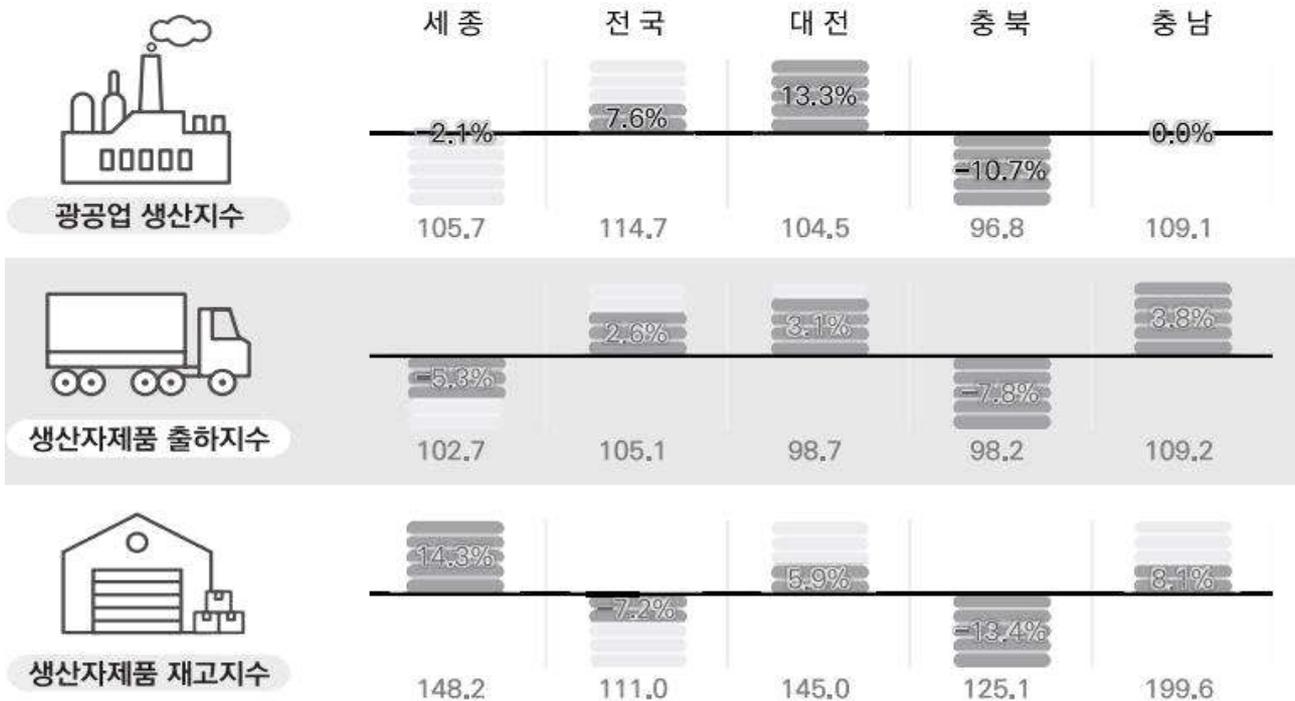
01. 주요 경제지표

출처: 링크 대전세종연구원, 월간세종경제 11월호

고 용 | 전년동월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전년동월차(실업률) 2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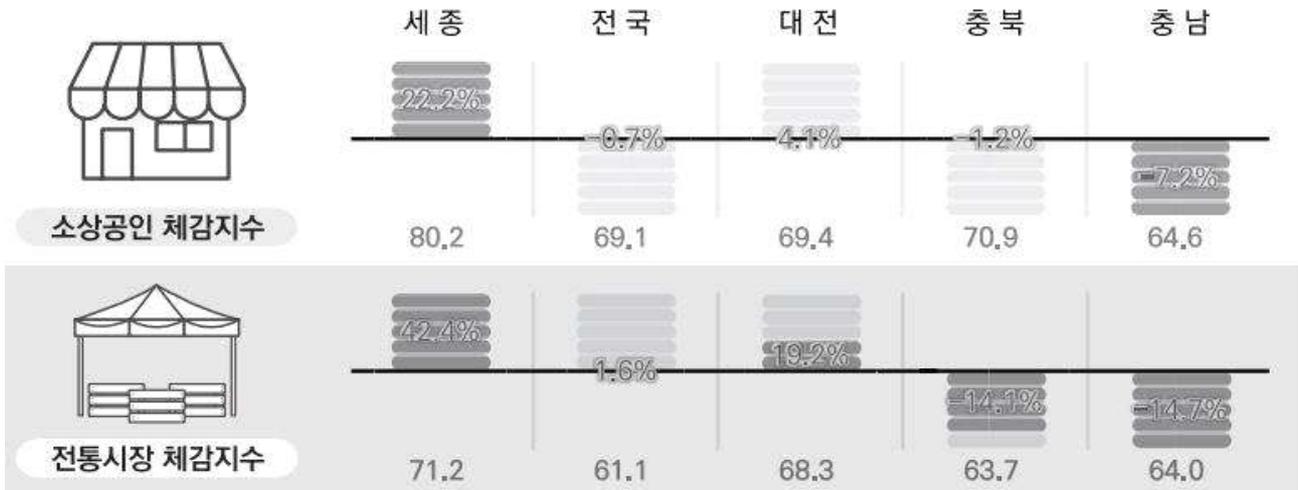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4. 10.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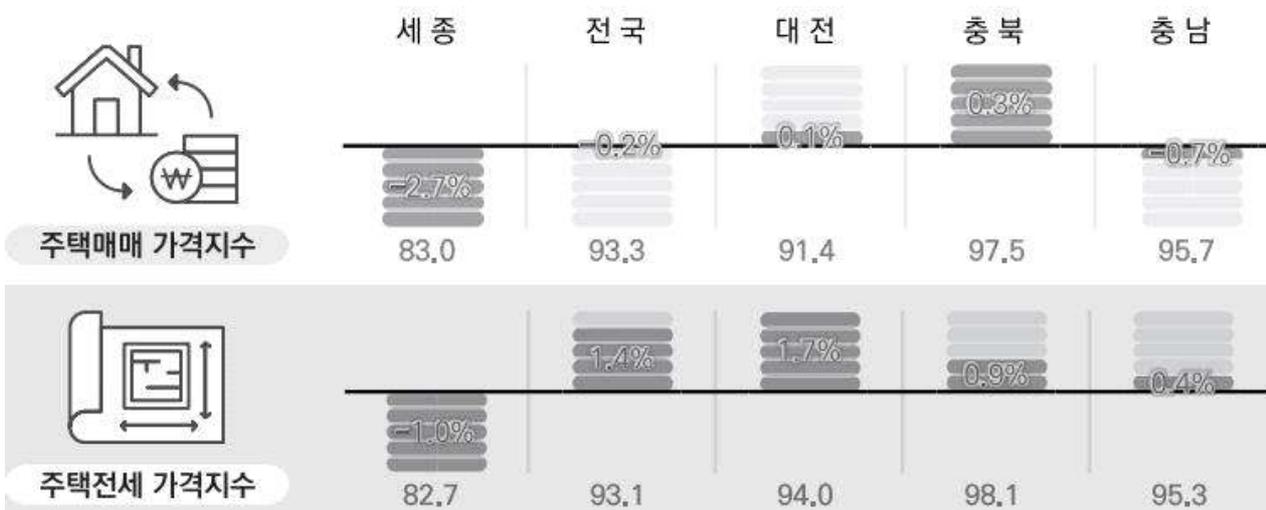
소 비 | 전년동월비/2020=100

2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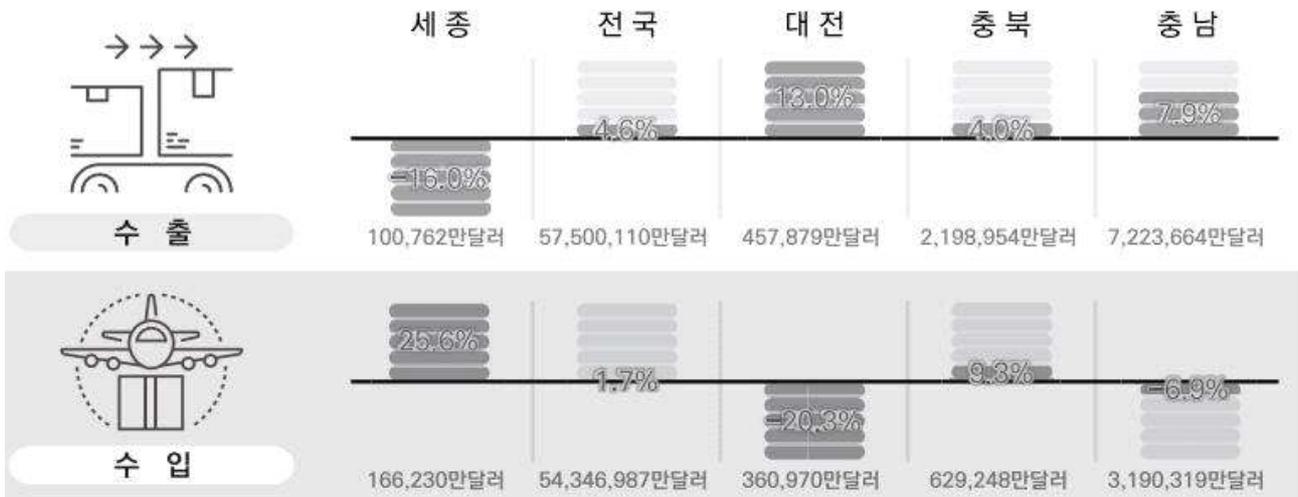
부동산 | 전년동월비/2022.1=100

24. 10.



수출입 | 전년동월비

2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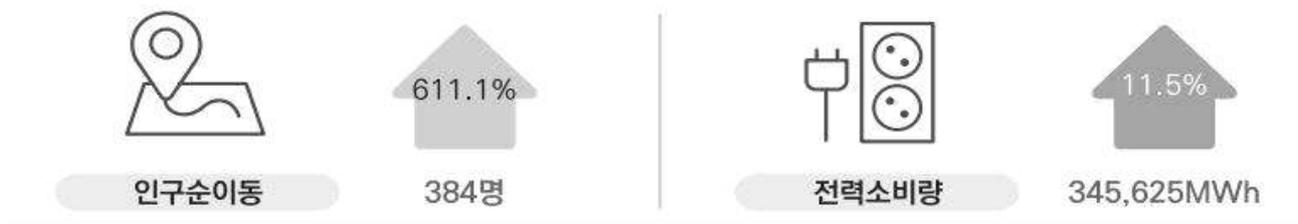
금융 | 전년동월비

24. 9.



지역특성 | 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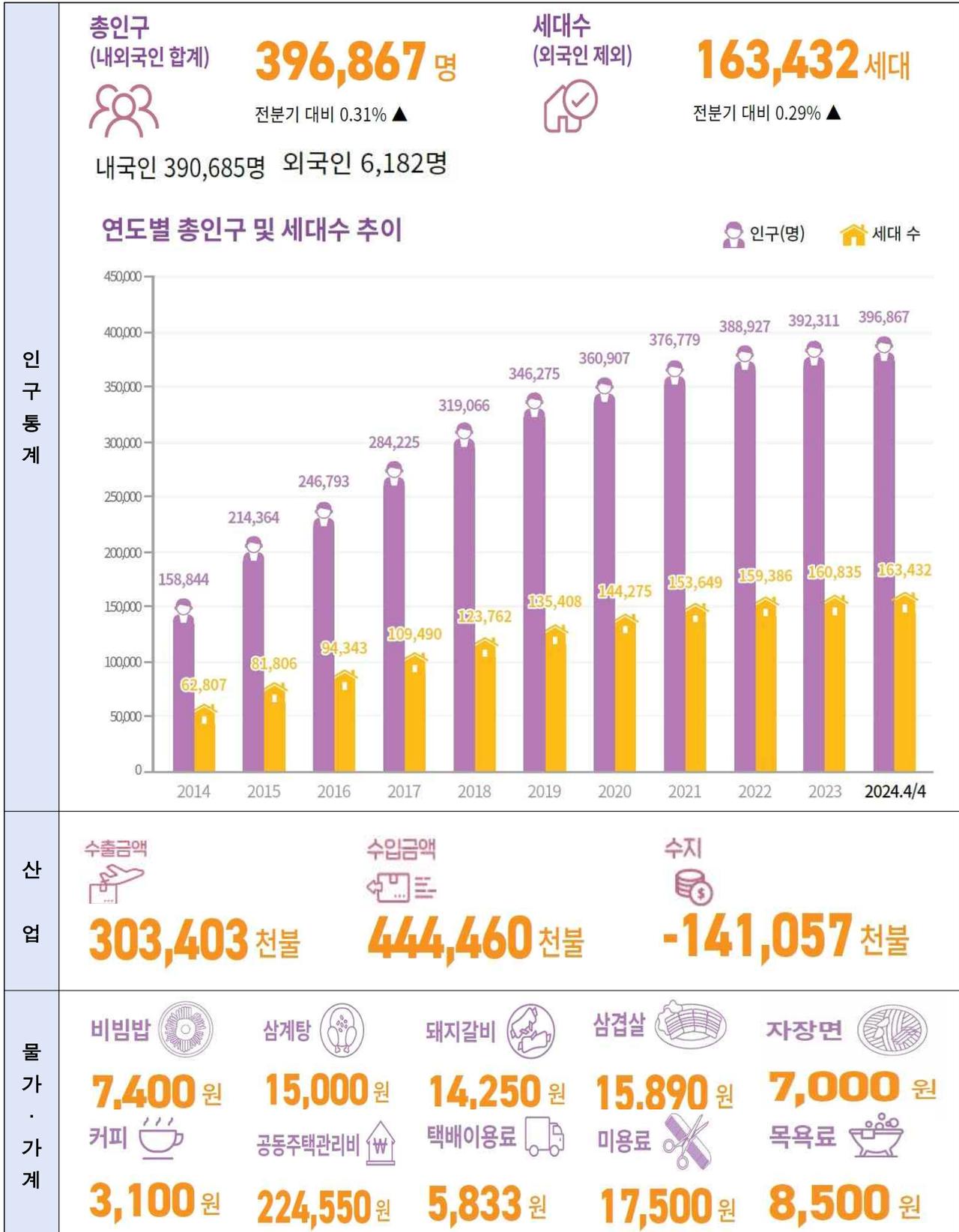
2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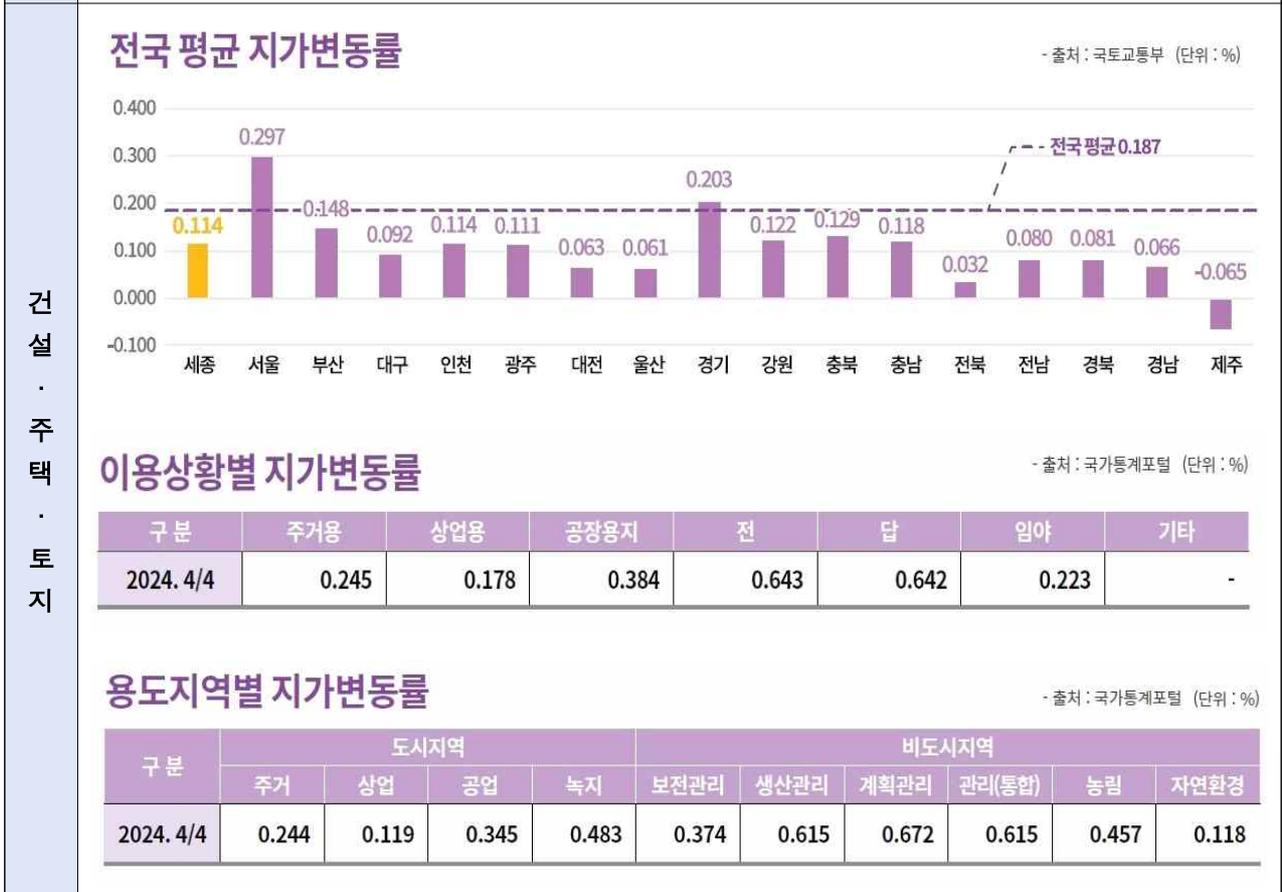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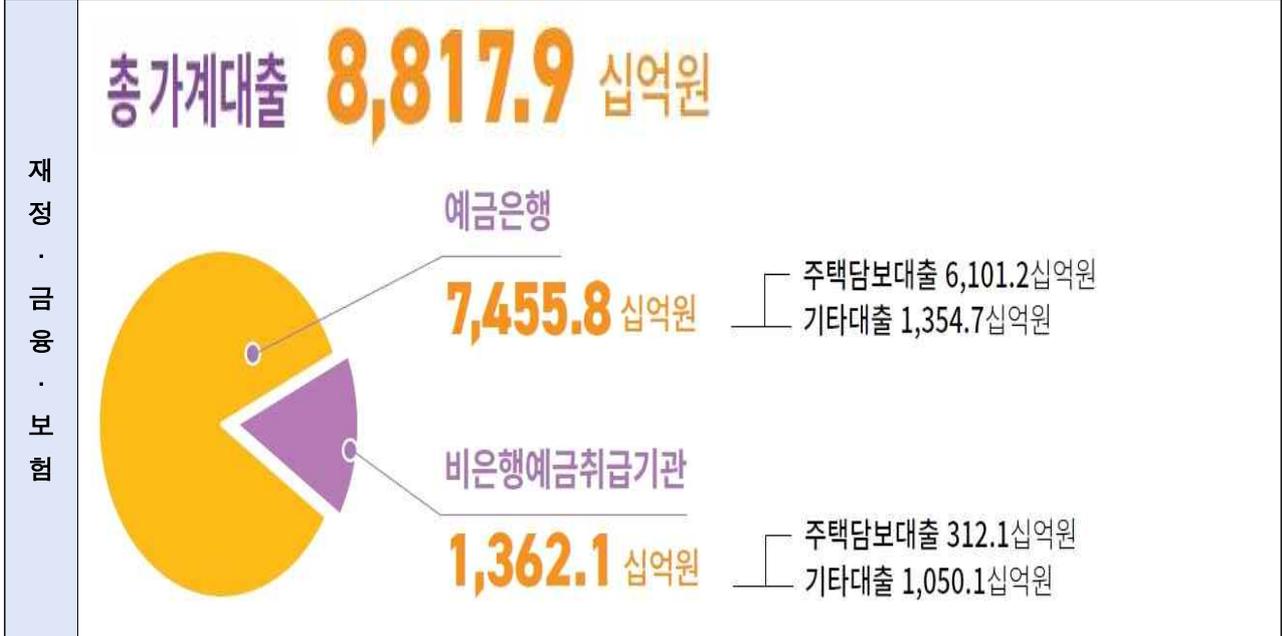
02. 세종시 주요 통계

출처·링크 ['24년 4분기 세종통계분기보](#)

2024년 4분기(10월~12월) 기준



고 용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323 천명	217 천명	106 천명	213 천명	4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64세 고용률	
	67.2%	66.0%	1.8%	69.9%	



03.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출처·링크 [사·도 유초등 교육통계, 2024 세종교육통계연보](#)

세종시 학교 총 개황

학교급	설립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총계	공립	162	165	167	3,179	3,309	3,329	64,449	66,354	67,188	
	사립	3	3	3	31	29	28	682	687	666	
	계	165	168	170	3,210	3,338	3,357	65,131	67,041	67,854	
유치원	공립	62	63	64	433	434	429	6,311	6,178	5,860	
	사립	2	2	2	7	5	4	111	76	42	
	계	64	65	66	440	439	433	6,422	6,254	5,902	
초등학교	공립	52	53	53	1,587	1,650	1,619	32,230	32,614	32,131	
	계	52	53	53	1,587	1,650	1,619	32,230	32,614	32,131	
중학교	공립	27	27	27	643	658	659	14,809	15,500	15,768	
	계	27	27	27	643	658	659	14,809	15,500	15,768	
고등학교	계	공립	20	20	20	481	519	561	10,913	11,833	13,150
		사립	1	1	1	24	24	24	571	611	624
		계	21	21	21	505	543	585	11,484	12,444	13,774
	일반고	공립	14	14	14	375	413	454	8,953	9,873	11,117
		사립	1	1	1	24	24	24	571	611	624
		계	15	15	15	399	437	478	9,524	10,484	11,741
	특성화고 직업	공립	2	2	2	36	36	37	570	564	623
		계	2	2	2	36	36	37	570	564	623
	특수목적고 일반	공립	3	3	3	45	45	45	779	788	790
		계	3	3	3	45	45	45	779	788	790
	자율고	공립	1	1	1	25	25	25	611	608	620
		계	1	1	1	25	25	25	611	608	620
특수학교	공립	1	2	2	35	48	55	186	229	279	
	계	1	2	2	35	48	55	186	229	279	
각종학교	공립	-	-	1	-	-	6	-	-	-	
	계	-	-	1	-	-	6	-	-	-	

주:학급수는 편성학급 기준임

(단위: 개교, 개, 명)

교원수			직원수			입학자			졸업자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6,062	6,320	6,332	527	536	528	17,385	18,087	17,789	15,178	16,443	16,432
65	60	56	4	4	4	264	231	226	201	200	227
6,127	6,380	6,388	531	540	532	17,649	18,318	18,015	15,379	16,643	16,659
1,020	1,048	1,054	108	104	100	2,842	2,840	2,653	2,757	2,829	2,540
14	9	9	-	-	-	61	23	16	54	40	31
1,034	1,057	1,063	108	104	100	2,903	2,863	2,669	2,811	2,869	2,571
2,425	2,503	2,437	207	212	208	5,525	5,299	4,833	4,865	5,306	5,412
2,425	2,503	2,437	207	212	208	5,525	5,299	4,833	4,865	5,306	5,412
1,341	1,392	1,362	98	97	94	4,961	5,363	5,420	4,223	4,786	5,102
1,341	1,392	1,362	98	97	94	4,961	5,363	5,420	4,223	4,786	5,102
1,208	1,292	1,356	103	108	110	3,986	4,509	4,809	3,270	3,472	3,328
51	51	47	4	4	4	203	208	210	147	160	196
1,259	1,343	1,403	107	112	114	4,189	4,717	5,019	3,417	3,632	3,524
901	977	1,041	71	73	75	3,322	3,824	4,086	2,711	2,816	2,710
51	51	47	4	4	4	203	208	210	147	160	196
952	1,028	1,088	75	77	79	3,525	4,032	4,296	2,858	2,976	2,906
88	88	89	11	14	15	189	207	236	90	203	173
88	88	89	11	14	15	189	207	236	90	203	173
162	167	163	16	16	16	271	275	270	268	253	250
162	167	163	16	16	16	271	275	270	268	253	250
57	60	63	5	5	4	204	203	217	201	200	195
57	60	63	5	5	4	204	203	217	201	200	195
68	85	108	11	15	14	71	76	74	63	50	50
68	85	108	11	15	14	71	76	74	63	50	50
-	-	15	-	-	2	-	-	-	-	-	-
-	-	15	-	-	2	-	-	-	-	-	-

「세종재정」 2025년 첫번째

발행일 2025. 3.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기획·조정 차하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작성 김운화 사무관, 문건아 주무관
신현지 주무관, 이옥선 주무관
김재원 주무관

전화 044-300-7531~7535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